

# '탕핑' 모드 전공의 8800명을 어찌할 것인가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탕핑(탕평)'은 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다. 중국의 저성장, 실업난 등에 지친 젊은 세대가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다. 대학 캠퍼스나 길거리에 드러누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자포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중국 젊은이들도 있다. 이런 젊은이들을 '탕핑족'이라 부른다. 중국 정부는 이 현상이 국가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이번 전공의 집단 사적 사태의 특징 중 하나는 전공의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고 대표도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2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밝힌 정도였다. 전공의들이 탕핑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처럼 그냥 집에서 쉬거나 여행 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전공의가 많다고 한다.

처음엔 이전 집단 휴진 때마다 정부가 각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처벌 표적으로 삼아서 몸 사리기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

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정부가 여러 차례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도 요지부동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전공의들이다. 이들이 정부와의 협상 등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의·정 갈등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가 전공의에게 대표단을 구성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답이 없다. "우리 대표가 없다"고 얘기한다.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집단행동 당사자들이 대화는 물론 접촉마저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대량 징계 눈앞에도 무대응 지속 30세 전후 MZ세대... 정책엔 민감 교수 말도 안 듣고 의협도 불신 생명 다루는 면허 의미 되새겼으면

이들은 정부는 물론 의사협회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2020년 집단 휴진 때 의협이 정부와 막판 협상에서 전공의들을 배제한다는 논란의 후유증 때문이다. 교수들이 환자를 떠나면 여론 지지를 받기 힘들니 일단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설득해도 안 듣는다고 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물리더라도 떠난 전공의들이 100%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얘기도 들린다. 기본적으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 많고, 과거보다 전문의에 대한 욕심이 줄어드는 등 과거 전공의들과 또 다르다는 것이다. 다만 평생의

업에 몸담아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부 정책에 민감하다고 한다.

지금 전공의들은 20대 후반에서 30세 전후의 MZ세대다. 낮은 임금에 주평균 80시간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운영을 떠맡고 온 직군이다.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매우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다. 이들이 전문의 이후를 보며 격무를 견뎌는데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린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진작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했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에 대한 대량 징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800명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3차 사전 통지 중 2차를 발송한 단계다. 윤 대통령은 1일 담화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대량 징계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면 의대생 대량 유급도 막을 길이 없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전공의들에게 세상이 자기들 뜻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들이 '탕핑' 모드에 있는 동안 국가에서 생명을 다루는 면허를 준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다.

## 社 説

###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 해소할 책임 선관위에 있다

4·10 총선 사전 투표가 5일, 6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서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사전 투표를 택한 유권자는 전체 투표자의 11.5%였다. 선거를 거듭할수록 참여율이 높아져 2022년 대선에선 36.9%에 달했다. 이제 사전 투표는 우리 선거의 주요한 부분이 됐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선거 당일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사전 투표는 공직자 선출의 정당성을 확보해 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는 바람직한 제도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엔 사전 투표 제도를 불신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현 여당이 참패한 2020년 총선은 사전 투표 조작설이 분출하는 계기가 됐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시연회까지 열어 그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2022년 대선 당시 전대미문의 '소쿠리 투표'로 부정선거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사전 투표를 감시하겠다고 전국 사전 투표소 40여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람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우선 사전 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QR 코드나 아닌 바코드로 인쇄하기로 했다. QR 코드에 개인 정보 등이 담겨 조작에 활용된다는 일각의 의혹을 의식했다. 이밖에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를 상시 공개하고, 사전 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런 미시적 조치들로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관위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며 내부 비리, 직무 태만 등 적폐를 쌓아왔다. 감시 사각지대에서 자기들끼리 이익을 누리며 '신의 직장'을 만들었다. 그러니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8차례 받고도 알지 못했다. 이를 지적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도 거부하다 여론의 지탄이 쏟아지자 마치 못해 수습했다. 선관위의 이런 모습이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갉아먹은 진짜 이유일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만큼은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국정 실패로 5년 만에 정권 넘긴 文의 다음 정부 품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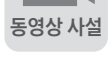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철심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잇따라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윤 정부는)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며 "이번에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야당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두어 정부가 정진 차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들에 대한 본격 선거운동에 나선 건 흔치 않은 일이다. 현실 정치에서 한발 물러나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그런데 지원 유세도 모자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했다. 전직 대통령으로 선을 넘는 일이거나 각종 실정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각종 파주기 정책으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속담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다.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문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배제됐다.

그런 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품평할 자격이 있다. 그는 퇴임 후 결핍하던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자화자찬을 했다. "잇힌 삶을 살고 싶다"더니 책방을 열고 다큐 영화를 찍었다. "5년간 이런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했고 감사원 감사엔 "무례하다"고 화를 냈다. 자신의 임기 때 준비를 시작한 잠버리 대화가 파행을 빚자 "국격을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 됐다"고 했다. 재임 때 반대하지 않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엔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 했다. 자신이 5년 동안 책임졌던 국정이 남긴 후유증이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는데 책임감도 못 느끼나. 정말 무지·무능·무도하고 실패한 정부가 누구였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섬 [184]

## 태안 박속밀국낙지탕

봄꽃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벚꽃이 제주에서 건너와 섬섬섬섬 여수, 고흥, 영암을 지나 서울 여의도로 질주한다. 살구꽃도 뒤질세라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개나리는 종종걸음으로 벚꽃을 쫓아간다. 벚꽃과 살구꽃이 가로림만을 지난 무렵 '갯밭 우사인보트' 철게들이 스텔스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곳에서 서는 능쟁이라 부른다. 뒤를 이어 다리가 긴 낙지도 몸을 푼다. 둘은 먹고 먹히는 관계다. 인간은 꽃구경을 하겠다고 야단법석이지만, 옛날에는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했다. 보릿고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남쪽 섬마을에서는 막 건진 연한 톳을 넣어 밥을 지었다. 지금은 로컬푸드라고 하지만 사실은 구황 식품이었다. 씨감자나 씨고구마는 목숨줄이냐 손

떨 수 없었다. 맛이 있을 리 없다. 거친 밥을 잘 넘어가게 하려면 국을 끓여야 한다. 그런데 국거리도, 육수를 낼 재료도 마땅치 않았다. 통영에 도다리라 속국이 있다면 태안에는 낙지와 박속이 있다. 땅과 바다가 만났으니 무슨 말을 더하랴. 탕보다 국이라 해야 할 것 같다. 연포탕과 다른 이유다. 박을 먹기 위해서도, 낙지를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밥을 먹기 위해, 거친 밥을 먹기 위한 지혜였다.

박속과 채소를 넣고 끓이면 다리가 긴 빨낙지를 넣었다. 낙지는 오래 삶으면 질겨진다. 낙지 발이 움푹푹할 때가 식감이 부들부들하다. 이때 꺼내 집나장에 찍어 먹는다. 그리고 시원하고 심심한 국물에 밥을 말아 먹으면 술 잘 넘어갔다. 그런데 밥이 아니라



칼국수나 수제비를 넣는다. 대가죽이 끼니를 해결하기에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더구나 식량이 귀한 시절에 말이다.

삼으로만 잡아야 부족하지 않을 만큼 낙지는 흔했지만 쌀은 귀했다. 갯벌을 막아 논밭을 만들어야 했던 시절이다. 쌀값은 비싸고 낙지값은 헐렸다. 그렇게 보릿고개를 이겨냈다. 지금은 봄·여름이 아니라 겨울에도 박속낙지를 먹는다. 밥을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낙지를 탐하는 것이다. 그 사이 밥은 넘쳐나고 낙지는 귀해졌다.

전남대 학술연구소

### 자치경찰 3년, 달라진 건 없이 세금 먹는 위원회만 100여 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만들어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평균 10개 안팎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제도 도입 3년 만에 만들어진 산하 위원회가 100여 개에 이른다. 운영비만 수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자치경찰제는 문재민 정부 때 경찰의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업무 등을 지자체 지휘 감독에 맡겨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경찰 업무는 달라진 게 거의 없고, 국민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위원회만 잔뜩 생긴 것이다.

위원회 운영도 엉망이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지난해 심의안건 중 지역 민생 치안 사업 발굴이 '0건'이었다. 자치경찰위원들이 이제껏 처리한 안건도 경찰이 제안한 것에 도장만 찍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몇몇 자치경찰위는 최근 선진국 사례를 배우겠다고 미국 LA, 뉴욕 등으로 '겸치기 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 자치경찰위 보직의 상당수는 전직 경찰이 차지하

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자치경찰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23.6%)이 경찰 출신이었다. 자치경찰제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면서 퇴직 경찰관들 자리만 만들어 준 셈이다. 이런 제도가 왜 필요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는 문 정권 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너무 비대해지는 경찰 권한을 줄이려고 급조한 제도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도입해 허점투성이다.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 소관인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경찰 소속이다. 가정 폭력 예방은 자치경찰 업무인데, 가정 폭력 수사는 국가경찰 업무다.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자치경찰위는 "인사·예산권이 없다"고 불만이지만 그것을 부여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선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미국도 자치경찰제를 두고 있지만 업무 처리 과정에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약·테러 등을 수사하는 광역 수사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우리도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양문석·민주당에 촉구한다

# "양문석 대출은 사기다" ... 그렇게 말한 한동훈을 바로 고소하라



운동권 세력 얼굴 피부는 검고 두통한가?  
양문석 박은정 공영운이 국힘이었다면?  
벌써 세상 뒤집어졌을 것

### 얼굴에 철판 끼는 철학

NI(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운동권은 [싸움 거짓 선동·후폭(厚腹) 철학]에 능하다. 얼굴에 철판 끼는 철학 말이다.

반면에 자유·보수 우파는 종계 말에 점잖고, 나쁘게 말해 협한 것 할 줄 모르는 샌님들이다. 이러니 게임이 되나?

자유 진영에서 가짜 스캔들이 터져도, 좌익은 그것을 뺨뺨히 해서 대통령 탄핵까지 간다. 대규모 흥위병 난동을 일으켜, 대통령을 구속하고 정권도 채간다.

반면에 요즘처럼 좌파의 의혹들이 매일같이 신문방송을 장식하는데도, 자유 진영은 [말의 비난]에 그칠 뿐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질풍(疾風) 노도(怒濤)]의 거창한 작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 양문석 박은정 공영운 3인 의혹들

[이(李)-조(趙)] 측 사람들의 의혹들에 관해 언론은 이렇게 전한다.

\* <민주당 양문석 후보 대출사기 의혹>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강남 아파트와 관련해 대학생 딸 명의 11억 원 편법 대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2024/03/29)

"양문석 후보는 딸을 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에 허위의 억대의 물품 구매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2024/03/31)

"양문석 후보는 '사기는 아니었다. 사기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3/30)

\* <조국당 박은정 후보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는 단단계 업체

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입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킨 남편을 두둔했다. 전체 건수가 160건이라,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 원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2024/03/29)

\* <민주당 공영운 후보 주택 투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경기 화성 읍에 전락공천된 공영운 후보가 현대자동차 부사장 시절 매입한 서울 성수동 땅과 건물에서 수십억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뒤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 2024/03/29)

### 즉각, 조사·수사 착수하라

이상 보도들은 지금 논란되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 측인 사들의 솔한 의혹 중 고작 3개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만 못지않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이 또 있다.

- ★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이다. 이게 [개인 문제라 나 몰라라] 할 일인가?
- ★ 배우자가 의혹을 부인하거나, 본인이 일부를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씩우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할 바는 분명하다.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라! 당국은 즉각 조사·수사에 착수하라!

"피해자가 있는 사기 대출이 맞다. 양문석은 언론 말고 나를 고소하라!" (한동훈)

국민은 깨어 있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응답률 50% 육박 조사는 획기적

이양승 칼럼: 조국과 조국당의 위선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카(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4월 1일 게재 되었습니다.

